

노동절과 전노대, “1년에 두 번은 나가자”

■ 노동조합을 처음 만드는 노동자들의 질문중 “민주노총 가입하면 매일 집회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가 많습니다. 충남지부 간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1년에 두 번, 5월 노동절과 11월 전노대(전국노동자대회)는 모든 조합원들이 꼭 나갑시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1979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전국의 노동자들은 11월이 되면 어김없이 모였습니다. 1988년 11월 13일,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노동법 개정” 현수막을 걸고 1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이후 3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앞에 다시 섰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탄생, “노동존중”은 멀었다

■ 2025년 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권 몰락과 이재명 정권 출범이라는 역동적인 정세속에서 치루어집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시기부터 “노동존중”을 표명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윤석열표 노동악법, 특히 회계공시·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여전히 살아있고, 현 정권은 이를 폐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개정된 노조법 2·3조는 절반의 개정에 그쳤습니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존립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원청 자본은 미완의 그친 개정 노조법 개정마저도 사문화시키려고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재벌은 하청노동자와의 직접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회사를 어찌하겠나”라며 발뺌하려는 노력이 역력합니다.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악법 폐기! 생존권 사수!

■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동악법 철폐가 올해 전국노동자대회의 핵심 요구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정년연장과 주4.5일제... 사회적 이슈로 포장된 변화의 조짐들이 언론에서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정치권력에 대한 환상과 의존은 위험합니다. 정치권력이 바뀐다고 “노동존중” 세상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노조법 개정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여는 자동문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체제와 정치권력의 반노동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의존하고 법 조문에 기대서는 노조의 자주성은 상실합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싸워야 합니다.

기후위기, 산업위기, 글로벌 관세전쟁, AI·디지털 시대가 노동의 위기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노동조합 핑계를 대며 해외로 빠져나가고, 정부는 미국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해외생산 현지화, 임금체계 개악, 공장 무인화·자동화 등 산업정책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고 싸워야 합니다.

■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태세입니다. 현장의 각자 대응으로 노동의 위기는 커녕 우리 현장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각자도생하다가 각개격파당합니다. 선배 노동자들이 그래왔듯,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야 하고, 모여야 하고, 함께 외쳐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구호가 특히 올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

